

아동학대 신고 즉시 경찰 개입 수사한다

학대치사 무기·5년 이상 징역 ... 집행유예 불허

부모가 가해자일 땐 퇴거·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질곡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처벌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국무총리 주재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

군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활용해 가정내 학대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추진된다.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서 아동안전교육을 충실하게 시행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와 온라인교육을 활발하게 벌여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제도를 활용해 비록 가벼운 학대행위를 저지른 부모일지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 상담받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외형상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해 온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

무자 교육 예산 확보, 지자체에 떠넘겨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의 국고 지원 등은 빠졌다. 이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올해 9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22개 직군에서 24개로 확대되지만 관련 교육 예산은 7000만원(보건복지부)에 불과하다. 현재 신고의무자만 의사, 간호사, 교사 등 140만명에 달한다.

신고의무자 교육의 주무부처를 놓고 중앙아동전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기관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예산은 2억원(여가부)뿐이다.

당정은 전국 51개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와 상담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예산 확보 등 알맹이가 빠진 상황에서 '정부의 지역 아동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해 봐야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영양·비만·절주 등 어르신 건강 보살핀다

광주 동구, 경로당 등 20곳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동구는 1일 경로대학·경로당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달 중순까지 경로대학·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20곳을 선정, 영양·비만·절주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구는 특히 틀니보급 및 잇몸질환 예방 스케일링, 치면 세정술, 불소 도포 등 치아 건강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동 주민센터와 노인요양시설 등과 연계해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어르신 940명을 우선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또 치매 대상자 등록에서부터 관리·조기검진·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모범적인 운영으로 어르신들로부터 큰 인기를 받은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도'를 적극 활용, 어르신들의 건강을 두루 살피겠다는 게 구청의 복안이다.

노회용 동구정장은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맞춤형료가 가능해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가 크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9500가정 예산 33억 확보

광주시는 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의 한 부모나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영아에 대해서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은 이용 가정이 증가하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마다 '아이돌봄보미' 인력 차이가 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광주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올해 9500여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33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보다 1300여 가정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8200여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예산이 없어 희망자가 모두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광주시는 또 서비스제공기관도 올해부터 동·서 권역으로 통합 운영, 제공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가 부담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062-616-2282).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으면서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북구, 소아 폐렴구균 연중 무료 예방접종

광주시 북구는 6일 생후 2개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북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에서 소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택 접종이었던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5월 1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으

로 전환돼 무료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폐렴구균이란 급성 세균감염 질환의 원인 중 하나로 90여 가지의 혈청형 중 약 10여 가지의 흔한 혈청형이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 폐렴구균 감염증 원인으로 밝혀져 예방접종을 통해 폐렴구

균에 의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예방접종은 ▲기저질환이 없는 생후 2~59개월 소아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생후 2, 4, 6개월 3회에 걸쳐 기초접종을 실시한 후 생후 12~15개

월에 1회 추가 접종할 수 있다.

이숙현 구청장 권한대행은 "소아의 경우 예방접종만으로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국가 지원으로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 실시된 만큼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호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시, 9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제3회 인구의 날(7월11일)을 앞두고 일·가정 양립, 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장과 지자체 등 이날이 좋은 직장 추천을 받는다.

추천 대상은 직장,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광주시는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추천 기관을 접수한 후 5월9일까지 '인구의 날' 홈페이지(http://711.ppfk.or.kr)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

이다.(개인 → 개인 추천 불가)

추천 내용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정책)운영 등 특정 사업에 대한 노력과 성과 사례 등을 중심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 직위 지원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직장보육시설 연계 활성화, 남성 육아참여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남성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 등 출산 친화제도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이낳기 좋은 직장 추천 받습니다

제품, 판매처는 고객센터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고객센터 **061 864 5788**

www.hcnara.co.kr

출시에정

제품명 : 간연애 식품유형 : 다류액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 황칠추출물(100%)
 제조원 : 황칠다남(주) 판매원 : 황칠나라유통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651-3 고객센터 : 061864-5788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